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손 병 돈
(평택대학교)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지분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요 용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 집단간 복지태도, 자기이해, 신뢰, 다항로지분분석

■ 투고일: 2016.10.29 ■ 수정일: 2016.12.8 ■ 게재확정일: 2016.12.28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지는 중요한 사회적 논쟁의 하나가 되었으며, 선거의 주요한 쟁점 이슈로 등장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무상 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였으며,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초연금, 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사항들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언론 및 정치적 논란 사항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복지 이슈나 복지국가의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는 복지정책의 결정이나 복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영순, 여유진, 2011, p.212).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복지이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 및 정치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로 요약될 수 있다(김운태, 유승호, 이훈희, 2013, pp.184-185). 복지확대 이슈는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정도와 관련된 이슈이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증세 이슈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과 관련된 이슈이며, 재원 확보가 복지의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복지확대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지금까지 복지의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몇몇 연구들은 비일관성 또는 이중성으로 우리나라 복지의식을 표현하며(최균, 류진석, 2000; 김영순, 여유진, 2011), 복지확대는 지지하지만 그와 관련한 증세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복지태도에서 계급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도(김영순, 여유진, 2015) 있고, 자기이해(류만희, 최영, 2009)나 이념성향으로(이아름, 2010; 김운태, 유승호, 이훈희, 2013) 우리사회의 복지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복지확대 및 증세를 모두 포함하여 이를 단일한 복지태도로 개념화하여 분석하였는가 하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나 증세에 대한 태도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확대와 증세를 모두 지지하는 집단과 복지확대를 지지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간 어떤 요인이 그러한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와 같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둘러싼 복지태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나라 복지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한다(최균, 류진석, 2000; 김영순, 여유진, 2011).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서는 찬, 반으로 갈리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학문적 쟁점이다. 이 주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구축 또는 발전방향이라는 실천적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실질적인 복지의 확대는 그것을 위한 자원 마련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맥락에서도 규명되어야 할 연구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확대와 증세라는 두 가지 이슈를 축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러한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와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에 초점을 맞춰, 복지확대 및 증세를 둘러싼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 및 증세와 관련한 국가정책 내지 정책 방향을 역사적으로 및 거시적으로 연구하였거나(양재진, 민효상, 2013; 최종호, 최영준, 2014), 실증적인 연구들도(전희정, 서동희, 2014; 김수정, 남찬섭, 2015) 본 연구의 초점인 복지확대와 그것을 위한 증세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두어지지 않았다. 특히 김수정과 남찬섭의 연구(2015)는 복지확대와 증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집단 구분 방법 및 분석모델의 설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복지태도의 결정에서 비계급성, 비일관성 명제에 대한 비판으로 서민 범주를 도입하여, 그것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초점과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러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복지확대를 찬성하나 증세에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는 두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II. 이론적 검토

복지의식 또는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는 자기이해, 정치이념, 신뢰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주로 제시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복지태도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 및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토대로 본 연구의 초점인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논함으로서 분석모델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가. 자기이해와 복지 및 증세에 대한 태도

자기이해(self-interest)의 관점은 복지와 관련한 사람들의 이해의 차이가 복지 이슈나이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김영순, 여유진, 2015; 이정진, 노대명, 2015; 김운태 등, 2013). 미국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유색인종, 저소득층, 저학력, 젊은 사람들이 복지를 더 지지하고, 반면 노인이나 백인 그리고 남자, 고소득층들이 복지보다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더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p.1030-1031). 이처럼 자기이해의 관점에 따르면,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사람들이 복지프로그램의 확대를 더 지지하고,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자원부담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복지의 확대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집단과 복지태도를 연결시켜 보면, 저소득층이나, 현재 복지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집단들이 복지확대에 대해 더 지지적이고, 고소득층이나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지확대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이해의 관점은 복지태도를 설명할 때 계층, 계급, 복지 수급권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자기이해에 따른 복지태도 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활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이는 의식이나 태도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므로, 복지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지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복지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지확대에 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권 보장이나 재분배에 대한 정부 책임 등 추상적 차원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자기이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자기이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이정진, 노대명, 2015, p.2). 왜냐하면 실제 일반인들이 구체적이고 복잡한 복지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기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복지태도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으로 자기이해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국내의 많은 실증연구들도 자기이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복지태도의 결정에서 계급, 계층의 영향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복지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이전 시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까지는 계층이나 계급이 복지태도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복지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라 할 수 있는 2010년 무렵부터는 복지태도 결정에 계층이나 계급의 영향이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대 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고소득층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더 지지하고, 저소득층이 그것을 더 반대하는 경향(김상균, 정원오, 1995; 김영란, 1995; 김영순, 여유진, 2011)을 보임으로서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본 계급, 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거나 계층이나 계급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김영순, 여유진, 2011; 류만희, 최영, 2009; 조정인, 2012)가 많았다.

보다 최근 년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계층이나 계급의 영향이 복지태도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윤태 등, 2013; 이현주 등, 2013).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더 찬성하며, 특히 중간층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나 증세에는 가장 소극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영순, 여유진, 2015). 비슷한 맥락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복지확대나 증세를 더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들(김신영, 2010; 김윤태 등, 2013)도 제시된다.

한편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복지태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복지경험이다. 우리나라의 복지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 복지경험을 분석모델에

투입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류만희와 최영의 연구(200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복지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김영순과 여유진의 연구(2015)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보육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복지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기이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태도 결정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자기이해 관련 변수들은 중요한 설명변수로 상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수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더욱이 복지태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 그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나. 정치이념과 복지 및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가치 및 이데올로기가 지적된다. 일찍이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은 복지이념을 유형화하며,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지적하였다(George & Wilding, 1985). 소극적 집합주의나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는데 반해, 반집합주의나 맑시스트는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이처럼 이념에 따라 복지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태도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념과 복지태도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및 증세에 대해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보수적일수록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신영, 2010; 이아름, 2010).

그런데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몇몇 연구들은 정치이념(또는 정치성향)과 증세 또는 복지태도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운태 등, 2013; 김수정, 남찬섭, 2015).

그런 점에서 정치이념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집단과 복지확대는 찬성하나 증세는 반대하는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요인일지는 불확실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다. 신뢰와 복지 및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 결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정책집행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아무리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부의 복지확대, 특히 증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별로 왜 복지제도가 상이하며, 발전 수준이 다른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정부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실증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Rothstein et al., 2010; 이현우, 2013, p.103에서 재인용). 이렇게 정부의 공정성, 신뢰 또한 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복지태도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확대에 동의하겠지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의한 복지확대, 특히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복지태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증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 정도가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수정과 남찬섭(2015, p.361)은 우리나라 복지태도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이나 비일관성은 세금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발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차이를 집단 구분하여, 그러한 집단간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분석할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정도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복지 및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이라고 주장된다(Svallfors, 1997; 류만희, 최영, 2009; Edlund, 1999; 백정미 등, 2008, p.329에서 재인용).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별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은 성변수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김신영, 2009; 류만희, 최영,

2009; 김수정, 남찬섭, 2015)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더 지지적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2015; 김윤태 등, 2013)는 연구들이 많다. 조돈문(2001)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여성이 증세에 대해 지지도가 낮다는 점을 한국에서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연령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인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자기이해의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하고, 또는 연령에 따른 보수화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노인들은 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이지만, 사회복지의 확대와 그에 따른 증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의 확대가 그들에게 덜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보수화는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실증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Culter, 1985;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들에서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김신영(2010) 및 백정미 등(2008)은 복지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지지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영순과 여유진(2015), 김윤태 등(2013), 그리고 이한나와 이미라(2010)의 연구는 연령이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평등, 민주주의, 관용에 대해 더 지지적이며(McClosky & Brill, 1983; Sullivan, Pierson & Marcus, 1982;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더 지지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은 추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에는 더 큰 지지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Jackman & Muha, 1984; 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에서 재인용)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평등이나 연대 등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더 수용적이므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의 확대나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해 등이 더 앞서서 작용하므로, 교육수준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국내의 실증연구 결과들을 보면, 교육수준은 복지태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영순, 여유진, 2015; 김윤태 등, 2013;

백정미 등, 2008)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류만희와 최영, 2009; 이현우, 2013)도 제시되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

2.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 요인

복지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쟁점은 복지확대 이슈와 증세 이슈이다. 정부에 의한 복지확대는 재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복지확대와 증세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 및 태도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은 상이할 수 있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증세에 대한 태도는 자기 이해를 보다 강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복지확대는 그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든, 아니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든 그 자체만으로는 최소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회 정의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증세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 이해를 보다 강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확대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이하에서는 증세로 표현)에 대한 태도를 찬성과 반대로 각각 2분한다면, 논리적으로 [복지확대 찬성 + 증세 찬성 집단(이하에서는 복지확대·증세찬성집단으로 표현)], [복지확대 찬성 + 증세 반대 집단(이하에서는 복지확대·증세반대집단으로 표현)] 그리고 [복지확대 반대 + 증세 반대 집단(이하에서는 복지반대·증세반대집단으로 표현)],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집단(이하에서는 복지반대·증세 찬성집단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로 구분한 집단들과 앞의 복지 태도에 관한 논의를 연결시켜 보자. 이를 앞에서 살펴본 자기이해 관련 변수로서 계층 및 재산변수, 복지수급변수, 정치이념 변수, 신뢰변수로서의 조세 부담의 형평성 인식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층 변수 및 재산 변수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연결시켜 보자. 복지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반대하고, 저소득층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찬성할 것으로 제시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p.1031). 이러한 주장은 자기이해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강하게 찬성하는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복지확대나 증세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은 스스로 자기 생활을 충분히 영위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굳이 국가의 복지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지 않으며, 복지확대가 주는 혜택보다는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은 다를 수 있다.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은 국가의 복지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는 자신들에게도 재정적 부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증세에 대한 태도는 중간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미온적일 수 있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다른 계층보다 저소득층이나 빈자들이 복지확대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영순, 여유진, 2015). 하지만 증세의 경우는 상이할 수 있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저소득층에게도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고, 이는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 때문에 증세를 반대하는 것이 자기이해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 허위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증세는 곧 모든 계층의 세금 증가로 이해되고, 따라서 저소득층들도 증세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복지수급변수의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Hasenfeld와 Rafferty(1989, p.1032)는 기여프로그램과 자산조사 프로그램 수급자의 복지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이해와 생활경험에 의해서 복지태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회보험과 같은 기여프로그램은 중산층 이상이 수혜자이며, 그들은 재산권이나 경제적 개인주의 맥락에서 복지태도를 결정하고, 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 수혜자는 빈곤층으로서 자기이해 및 복지수혜 경험에 기초하여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수급 변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수급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복지확대는 자신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복지확대가 자신들의 세금 부담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반면 장애인연금,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등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복지혜택의 경험이 있으나 그 혜택 정도가 크지 않다. 이들은 저소득층으로서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세금 납부의 경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복지확대는 찬성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증세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수급은 복지혜택을 경험하

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는 재산권 인식이 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보험 수급자들과 비수급자간에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의 수급경험도 복지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복지확대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혜택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집단의 구성이 계층적으로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증세 부담까지 단일하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다음으로 정치이념 변수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의 관계를 살펴 보자.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평등주의 가치가 강한 사람들이 복지 확대와 증세를 둘 다 찬성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진보주의자는 보다 평등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 복지확대와 조세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확대와 증세를 모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진보적인 정치이념은 규범적인 사회정의의 차원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해의 문제로 연결 될 때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복지확대 이슈는 당위 내지 규범의 차원이라 한다면, 증세 이슈는 현실적인 이해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사회정의상 바람직한 문제이나 그것의 현실적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이념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복지확대 및 증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복지확대에 대한 찬성, 반대 구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의 측면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인식 변수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연결하여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 특히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조세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그러한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즉 세금 부담이 형평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갖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 [복지반대·증세찬성 집단],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과 같이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계층, 재산변수, 사회복지수급경험, 정치이념변수,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변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8차(2013) 원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8차 원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가 매년 수집하는 가구 및 가구원 개인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면서 부가조사로 '복지인식조사'를 추가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의 '복지인식조사'는 표본가구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4,18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4,185명 가구원에 대해 조사한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자료와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및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와 관련한 4범주의 집단변수이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4범주의 집단은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복지태도란 복지라는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가치, 신념,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복지태도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무엇에 대한 태도인지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로 구체화하여 복지태도 개념을 사용한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에서 문6) 중 ‘건강보험 및 보건의’,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 9개 범주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든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범주는 ① 훨씬 더 많이 지출 ② 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 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지출과 관련한 위 9개의 문항을 총합하여,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변수’는 최소값이 9이고, 최대값이 45인데, 이를 구성하는 하위 문항이 5점 척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확대에 대한 복지태도 총합 점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은 9, 좀 더 지출은 18, 현재수준으로 지출은 27, 현재보다 조금 덜 지출은 36, 현재보다 훨씬 덜 지출은 45이다.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 변수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에서 문 15)로 측정하였다. 문 15)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대체로 찬성 ④ 보통 ⑤ 대체로 반대 ⑥ 반대 ⑦ 매우 반대이다. 증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문 15)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증세를 찬성하는 것이므로, 증세에 대한 매우 찬성은 7이고, 대체로 찬성은 5이며, 1은 매우 반대, 2는 반대, 3은 대체로 반대, 4는 보통이다.

복지확대 및 증세 각각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복지태도의 범주화

		복지 확대	
		찬성	반대
증세	찬성	①	②
	반대	③	④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앞에서 설명한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변수와 ‘증세에 대한 태도’ 변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법으로 군집분석을 하였다¹⁾.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면,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므로, 군집수를 4개로 설정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를 분산분석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와 관련한 4개의 집단은 통계적으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위 4개 집단의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 변수 각각의 분포 특징을 고려하여, ①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②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③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④복지확대 반대+증세 반대 집단으로 명명하고, 이렇게 구분된 4개의 복지태도 집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표 2. 군집분석 결과에 의한 복지태도 집단 분류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 구분	복지확대 증세찬성	복지확대 증세반대	복지반대 증세찬성	복지반대 증세반대	
백분율	43.4	25.5	13.0	18.1	
평균	17.90	20.53	25.91	26.89	
복지확대에 대한 복지태도	표준편차	2.22	2.62	2.15	2.99
	최소값	9	9	24	24
	최대값	20	24	39	40
	평균	5.86	3.28	5.7	3.01
증세에 대한 복지태도	표준편차	0.61	0.81	0.61	0.95
	최소값	4	1	5	1
	최대값	7	4	7	4

1) 본 연구에서 복지확대 태도 변수와 증세 태도 변수의 중간 범주(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보통)를 기준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증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이를 교차하여 4개의 집단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지확대 태도 변수를 구성하는 9개의 하위 범주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계층변수는 가구소득이 가구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가구소득이 가구 중위 가처분소득의 50%를 초과하면서 150% 이하인 가구를 중간계층으로, 150%를 초과한 가구를 고소득층으로 정의하고, 고소득층을 기준 범주로 설정한다. 이러한 계층 정의는 OECD나 한국 통계청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김영순, 여유진, 2015). 재산 변수는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한다.

복지 수급권 관련 변수로 사회보험, 보편적 서비스, 범주적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각에 대한 수급 여부 변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보험 수급여부는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부로 측정하였고,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 범주로 사용한다. 보편적 서비스 급여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고, 받지 않은 경우를 기준범주로 사용하였다. 범주적 공공부조 변수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중 어느 하나라도 수급하였는지 여부로 측정하고,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수는 그 급여를 수급하였으면 1을, 수급하지 않았으면 0으로 측정하고,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범주로 사용한다.

정치이념 변수는 복지인식조사의 문 21)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으로 표현되었으며, ① 또는 ②로 응답했으면 진보적, ③은 중도, ④ 또는 ⑤로 응답했으면 보수적으로 구분하였고, 중도 범주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변수는 복지인식조사의 문 14)인데, 이 문항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매우 그렇다 ⑦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7점 척도이다. 따라서 조세를 형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 값이 크며, 불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 값이 작다. 이 변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한다.

성변수, 연령변수, 교육수준 변수 등 사회 인구학적 요인 변수들은 모두 범주적 변수로 측정하였고, 기준범주로 여성, 60세 이상, 대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3.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비고
재산	순재산의 자연로그값	
소득계층	저소득층=1; 가구소득이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중간층=2; 가구소득이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150%인 가구 고소득층=0; 가구소득이 중위 가구가처분소득의 150%를 초과한 가구	
사회보험	수급=1, 비수급=0	공적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 유무
보편적급여	수급=1, 비수급=0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수급 유무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1, 비수급=0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수급 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1, 비수급=0	
정치이념	진보적=1, 보수적=2, 중도=0	복지인식조사 문 21)
조세 부담의 형평성 인식	7점 척도; 매우 불공평 1, 매우 공평=7	복지인식조사 문 14)
성	남자=1, 여자=0	
연령	29세 이하=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세 이상=0	
교육수준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 이상=0	

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은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이다. 다항로짓분석모형의 종속변수는 앞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중심으로 구분한 4 범주의 복지태도 집단변수이다. 다항로짓분석모형은 ① 복지확대·증세찬성 ② 복지확대·증세반대 ③ 복지반대·증세반대, ④ 복지반대·증세찬성으로 범주화한 복지태도 집단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표 3>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집단별 태도 차이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는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자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에 응답한 사람들로써 한국복지패널 응답가구의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이다. 분석대상 표본 수는 4,108명이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08)

변수	범주	%/ 평균
성	남자	43
	여자	57
연령	29세 이하	8.8
	30-39세	14.4
	40-49세	18.3
	50-59세	16.5
	60세 이상	42.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3
	고졸	27.1
	전문대 졸	11.5
	대졸 이상	17.1
소득계층	저소득층	25.5
	중간층	46.6
	고소득층	27.9
ln순재산 (만원)*	평균/ 표준편차	9.45/2.39 (46,939/571,009)
사회보험	수급	31.7
	비수급	68.3
보편적 서비스	수급	9.3
	비수급	90.7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	38.7
	비수급	61.3

변수	범주	%/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7.7
	비수급	92.3
	진보적	21.0
정치이념	중도	42.6
	보수적	36.4
조세 부담의 형평성 인식	평균/표준편차	2.09/1.08

*()는 순재산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자의 43%는 남성이며, 여성은 57%이다. 또한 분석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9세 이하, 즉 19-29세가 8.8%, 30대가 14.4%, 40대가 18.3%, 50대가 16.5%이고 60세 이상이 42%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44.3%로 가장 많고, 고졸이 27.1%, 전문대 졸이 11.5%, 대졸 이상이 17.1%이다. 계층 분포는 저소득층이 25.5%, 중간층이 46.6%, 고소득층이 27.9%이며, 순재산은 평균값이 약 4억 7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 변수들의 분포를 보면, 사회보험 수급자가 31.7%,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 수급자가 9.3%,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은 38.7%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7%이다.

분석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본인의 정치 이념은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21%, 중도가 42.6%,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36.4%였으며, 조세부담 형평성 인식 변수의 평균값은 2.09이며, 표준편차는 1.08로, 평균적으로 조세부담이 조금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복지확대 및 증세에 관한 집단간 복지태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태도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러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와 <표 6>이 [복지확대·증세 반대] 집단을 기준변수로 하여,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는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는 소득계층변수, 복지수급 변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 여부 변수, 정치이념 변수,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변수이고, 기타 변수로 성변수, 연령, 교육수준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변수의 영향을 보면,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그다지 강건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복지수급 경험 변수들 중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변수만이고, 나머지 사회보험 수급여부, 보편적서비스 수급여부,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여부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복지의 확대 및 증세 모두 자신들에게 부담보다는 혜택으로 결과한다는 점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복지확대 및 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 부담 형평성 인식 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조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결국 조세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복지태도와 관련한 기존연구에서 복지확대는 찬성하나 증세는 반대하는 우리나라 복지태도의 이중성에 대한 해석에서 그것이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과 관련될 수 있다는 지적(김수정, 남찬섭, 2015, p.361)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복지확대·증세 반대] 집단 대비 [복지확대·증세 찬성] 집단의 다항로지분분석 결과

	B	Exp(B)
로그 순재산	-.018	.982
소득계층(기준: 고소득층)		
저소득층	-.282*	.754
중간층	.108	1.114
사회보험(기준: 비수급)		
수급	.059	1.061
보편적서비스(기준: 비수급)		
수급	-.059	.943
범주적공공부조(기준: 비수급)		
수급	.077	1.081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 비수급)		
수급	.632***	1.882
정치이념(기준: 중도)		
진보적	-.100	.905
보수적	-.299***	.741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231***	.794
성(기준: 여성)		
남성	.314***	1.369
연령(기준: 60대 이상)		
20대	-.435*	.647
30대	-.496**	.609
40대	-.238	.788
50대	-.023	.978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475***	.622
고졸	-.633***	.531
전문대졸	-.254	.775
절편	.848***	
N=3524, -2log likelihood=9311.233 $\chi^2=254.546***$		

† 기준: 복지확대 + 증세 반대

***p<.01 **p<.05 *p<.1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지확대를 찬성하며,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 집단을 구분하는 데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정치이념이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중도적인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0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이념상으로 진보냐 중도냐라는 차이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보수와 중도간의 정치이념 차이가 복지 및 증세를 둘러싼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한 변수가 아닌 기타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자.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 모두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이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 보다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유의수준 .01), 60대 이상보다 20대(유의수준 .1) 및 30대(유의수준 .05)가,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 및 고졸(유의수준 .01)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변수의 영향은 외국을 대상으로 복지태도를 실증연구한 결과(Svallfors, 1997; Edlund, 1999)와는 상이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지태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복지확대나 증세에 대해 성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김신영, 2009; 김수정, 남찬섭, 2015) 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복지확대나 증세를 더 지지하는 것(김영순, 여유진, 2011; 2015; 김윤태 등, 2013)으로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연령 변수 및 교육수준 변수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 않는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 지지한다는 연구들(백정미 등, 2008)이 있는가 하면, 연령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김영순, 여유진, 2015; 김윤태 등, 2013; 이한나, 이미라, 2010)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더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류만희, 최영, 2009; 이현우, 2013)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은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김영순, 여유진, 2015; 김윤태 등, 2013)도 있다.

다음으로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과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²⁾.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

2) <표 6>은 [복지확대·증세 반대] 집단 대비 [복지반대·증세반대], [복지반대·증세찬성] 집단의 다항로짓 분석결과이다. 그런데 [복지반대·증세찬성] 집단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문문항을 보면,

어 있다.

두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로그 순재산, 소득 계층, 정치이념 변수(유의수준 .05)이다. 유의수준 .01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유의수준 .05). 재산변수의 영향은 부자일수록 복지확대나 증세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기이해의 관점에서의 복지태도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소득계층변수의 영향은 앞의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 대비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결과에서도 저소득층은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관되게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자신의 이해에 기초한 복지태도로 설명된다.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을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도인 사람들보다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찬성·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앞의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에는 정치이념상으로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분석결과를 종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이념상으로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는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하지만, 증세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에는 유의미한 설명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함의해 준다.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 여부 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는 두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지만, 유의수준 .1에서는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이 미수급자보다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범주적 공공부조라 하면, 기초노령 연금, 근로장려세제, 장애인연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만,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집단으로서 복지급여 수혜의 경험도 있다. 그리하여 복지의 확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증세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지확대를 반대하면서 증세를 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표 6>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복지확대·증세 반대] 집단 대비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표 6. [복지확대·증세 반대] 집단 대비 [복지반대·증세반대], [복지반대·증세찬성] 집단의 다항로지분분석결과

	복지반대증세반대		복지반대증세찬성	
	B	Exp(B)	B	Exp(B)
로그 순재산	.080***	1.083	.008	1.009
소득계층(기준: 고소득층)				
저소득층	-.501**	.606	-.453**	.636
중간층	-.004	.996	-.086	.918
사회보험(기준: 비수급)				
수급	.191	1.211	.211**	1.235
보편적서비스(기준: 비수급)				
수급	-.074	.929	-.067	.936
범주적공공부조(기준: 비수급)				
수급	-.257*	.773	-.120	.887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 비수급)				
수급	-.529	.589	.098	1.103
정치이념(기준: 중도)				
진보적	-.336**	.715	.143	1.154
보수적	-.028	1.029	-.007	.993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078*	1.081	-.159***	.853
성(기준: 여성)				
남성	-.029	.971	.182*	1.199
연령(기준: 60대 이상)				
20대	.094	1.098	-.753***	.471
30대	-.206	.814	-.536**	.585
40대	.276	1.318	-.161	.852
50대	.153	1.166	.007	1.007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338	.714	-.352**	.703
고졸	-.492**	.611	-.530***	.589
전문대졸	-.410**	.663	-.391**	.676
절편	-.734*		.744**	

N=3524, -2log likelihood=9311.233 $\chi^2=254.546***$

† 기준: 복지확대 찬성+ 증세 반대

***p<.01 **p<.05 *p<.1

기타 변수 중 두 집단간 복지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수준 변수뿐이었다. 교육수준 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 대비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와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앞의 분석에서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중졸 이하 및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대졸보다 낮은 사람들이 복지확대를 통한 혜택은 수용하지만, 그에 대한 재정부담은 원치 않는다는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반대를 중심으로 복지태도를 [복지확대·증세찬성], [복지확대·증세반대], [복지반대·증세반대], [복지반대·증세찬성] 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러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특히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구분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주요한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짓는 주요한 요인은 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 정치이념, 조세부담의 형평성 인식 정도 등이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정치이념이 중도인 사람보다 보수적인 사람들, 조세부담이 형편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있는 사람들이 수급경험 없는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과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간 복지태도를 구분

짓는 주요한 요인은 로그 순재산변수, 소득계층변수, 정치이념 변수,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여부 변수 등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 범주적 공공부조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복지반대·증세 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및 실천적으로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복지확대 및 증세를 둘러싼 집단간 복지태도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자기이해의 관점이 설명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 그리고 재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자기이해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저소득층은 복지확대의 혜택은 원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이해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복지확대와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의 증대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자신들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기이해의 관점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계층 변수의 영향이다. 복지태도와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계층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순과 여유진의 연구(2015)는 저소득층이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복지확대 및 증세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김윤태 등(2013)은 소득이 낮은 계층(200만원이하)이 소득이 높은 계층(401만원 이상)보다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과 일정정도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복지확대에는 찬성하나 증세에는 찬성보다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복지태도와 계층간의 관계는 보다 더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과

관련하여 일정한 함의를 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해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김신영, 2010; 이아름, 2010; 김윤태 등, 2013)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가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도적인 사람들보다 [복지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 진보냐 중도나라는 차이는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과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이념 요인이 우리 사회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며, 정치이념과 복지태도와의 관계는 보다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해 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조세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이 비형평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증세찬성] 집단보다 [복지확대·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질적인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증세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조세부담이 형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한국 복지태도의 특징으로 지적해 온 이중성의 문제가 일정 정도 신뢰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복지태도를 갖는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 주고 있다.

손병돈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 빈곤문제, 한국 가족문제, 한국 복지의 특성 등이다.
(E-mail: bsdson@ptu.ac.kr)

참고문헌

- 김상균, 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pp.1-33.
-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5), pp.67-90.
- 김수정, 남찬섭. (2015).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pp.351-374.
- 김신영.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사회적 신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 자료*. pp.561-572.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3), pp.87-105.
- 김영란. (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9, pp.229-250.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 김영순, 여유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5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의 복지수준과 재정의 균형*. pp.84-115.
-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타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 연구*, 45, pp.183-212.
- 류만희, 최영. (2009). 복지정책의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91-210.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시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pp.319-344.
- 양재진, 민효상.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계의 기원과 복지증세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88, pp.48-96.
- 이아름. (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이정진, 노대명. (2015). 복지수급자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pp.195-224.
- 이한나, 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pp.254-286.
- 이현우. (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 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pp.95-119.
- 이현주, 강상경, 김수완, 이선우, 전지현. (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17(1), pp.157-191.
- 조정인. (2012).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변인과 상징적 정치이념변인이 유권자들의 복지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5(2), pp.153-173.
- 전희정, 서동희. (2014).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복지선호와 증세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pp.33-62.
- 최균,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pp.223-254.
- 최종호, 최영준. (2014). 증세없는 복지확대의 정치-한국과 일본 비교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pp.1106-1129.
- Cutler, Stephen. (1985). Aging and Attitude Change: Models and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XII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pp.341-370.
- George, Victor N. & Wilding, P. (1985).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Hasenfeld, Y. &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pp.1027-1048.
- Jackman, Mary R. & Muha, Michael J. (1984). Education and Intergroup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pp.751-769.
- McClosky, Herbert & Alida Brill. (1983). *Dimensions of Tolerance*. NY: Russel Sage.
- Rothstein, B., Samanni, M., & Teorell, J. (2010). Quality of Government, Political

Power and the Welfare State. *QOG Working Paper Series*, 2010: 6.

Sullivan, John L., James Pierson & Marcus, George E.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2), pp.283-304.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Shon, Byong Don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Keywords: Attitude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Self Interest, Political Ideology, Confidence in Government, Multinomial Logit